사설

AI가 바꾼 강의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였던 '세무냥이'의 부정행위 자수로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 수법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큰 파장을 일으킨 자백 이후 다른 국가자격시험에서도 부정행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관련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간 시험은 개인의 노력과 실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공정한 평가 방식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AI와 각종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시험에서 얻은 점수가 과연 응시자의 실력을 온전히 증명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직하게 시험을 치른 사람마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받는 상황에서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번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을 묶은 '커닝 세트'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젓이 팔렸고, 심지어는 일부 판매처에선 품절됐다는 보도가 나기도 했다. 2027학년도 수능이 끝난 뒤 적발된 부정행위자는 111명으로, 그중 스마트 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사례도 5건 있었다. 적발된 것만 이 정도다.

시험과 평가로 작동하는 공간인 대학에서도 AI를 둘러싼 부정행위와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연세대와 서울대, 고려대 등에서도 시험 중 AI나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우리학교에서는 한 교수가 당장 다가오는 기말고사에서 학생들의 뽈테안경 착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AI와 스마트기기의 발전이 대학의 시험 풍경까지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학이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고 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당연히 필요하다. 다만 AI 사용을 금지하고 시험 감독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를 활용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손톱에 부착하는 카메라부터 머리카락 굵기만큼 가는 카메라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정행위 수법이 얼마나 더 있을지 알 수 없다. AI가 답을 대신 만들어주는 시대에 학생들이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지부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생성형 AI가 과제의 자료 조사부터 글쓰기까지 대신할 수 있게 되며 제출된 결과물만으로 학생이 실제로 무엇을 이해하고 사고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졌다. 완성된 결과물뿐만 아니라 학생이 생각을 발전시킨 과정과 내용을 이해하고 검증하는 능력,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설명하고 논증하는 역량도 평가의 대상이 돼야 한다. 우리학교가 배포한 AI 활용 교육 가이드라인 역시 최종 결과물뿐 아니라 아이디어 발전과 검증, 수정 과정 등을 함께 살피도록 권고하고 있다.

AI는 이미 강의실에 들어왔다. 이를 부정하거나 막는 것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일이다. 그동안 대학이 어떤 평가 방식이 공정한지만을 고민해 왔다면, 이젠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실력으로 인정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AI 시대에도 대학 교육이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그 가치를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공약, 구체화해야 할 때

공약을 판단하려면



서라수 기자
sooxoosoo@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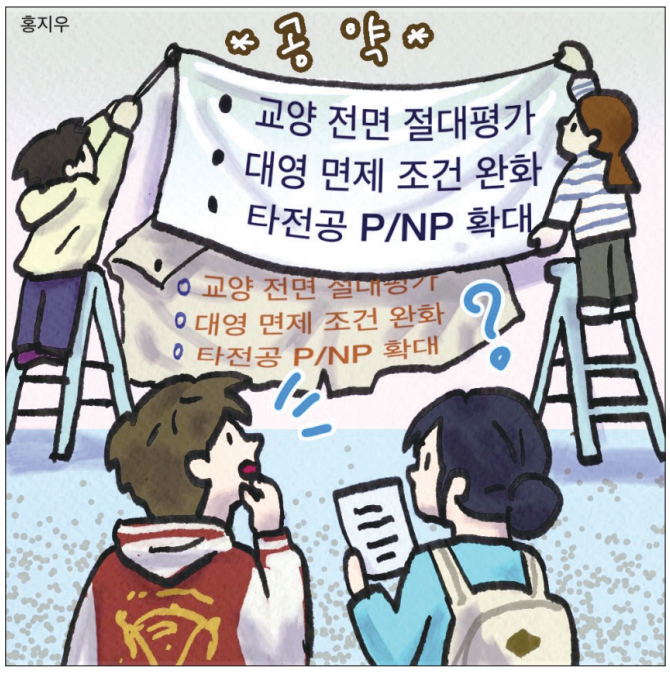
총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번 선거에는 각 캠퍼스에서 하나의 선거운동본부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했다. 정책공청회 취재를 준비하며 양캠 총학생회 선본의 정책자료집을 훑어보니 익숙한 공약들이 눈에 띄었다. 교양과목 전면 절대평가 추진, 대학영어 면제 조건 완화, 타전공 P/NP 확대 등 이전 총학생회에서 꾸준히 제시해 왔던 공약이다.

4학기째 기자 활동을 하며 지켜본 학생회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학교나 외부 주체와의 협의로 이끌지 못했다. 규칙 개정이나 단순한 요구안 전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같은 공약이 매년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유다. 기존 공약을 이어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전 추진 과정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알고 어떤 점을 보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공약 실행 방안도 구체적이지 않았다. 총장 선출 과정에서 제시한 학생 투표 반영 비율 25%를 세부 논의를 거치지 않고 후보자 개인의 판단에 근거해 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단순히 총장 선출제에 참여하는 주체가 4개라는 이유만으로 각 주체에 동일한 비율을 배분한 것이다. 일부 공약의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당선 후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답했다. 수치의 산정 근거나 공약 이행에 따른 효과, 그리고 당선 후 논의할 사안과 절차는 여전히 희미했다.

공약이 이행되고 실제 학내 변화로 이어지려면 선거운동본부 단계부터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만 유권자가 공약 이행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정식으로 총학생회가 출범하기 전 모든 공약을 구체화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공약을 내건 후보라면 실현 가능성과 예상되는 한계를 유권자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만평 반복되는 공약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신동면 | 편집장 권도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태영특수프린테크

세시봉

취업 한파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3학년이면 취업은 어디로 생각하고 있어요?" 24학번, 벌써 4학년을 앞두고 있다. 주위 가족이나 교수님이 이젠 취업을 이야기한다.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졌던 취업이 현실로 다가왔다. "음... 저는 되는대로 가려고요." 아직 뚜렷한 계획도, 남들처럼 내세울 만한 인턴 경험이나 어학 성적도 없는 나는 그저 얼버무릴 뿐이다.

취업을 잘 모르는 나는 취업하려면 일단 어디든 지원서를 넣어보라는 말을 듣는다. 하지만 지원서를 낼 곳부터 줄어들고 있다.

지난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1.7%p 하락한 42.9%를 기록했다. 벌써 30개월째다. 청년 취업자도 19만 6천 명 감소했다. 취업을 위해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과 달리, 정작 우리가 들어갈 문은 좁아지고 있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은행은 지난 8월 청년층 일자리 감소분 28만 5천 개 중 26만 8천 개가 인공지능(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AI만으로 취업난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기업의 채용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기업은 신입을 교육하기보다 실무 경험이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고, 신입이 맡던 기초 업무는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참 이상한 일이다. 기업은 경력 있는 사람을 원하는데, 신입은 취업하지 못하면 경력을 쌓을 수 없다. 대학생들은 취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자격증을 따고, 인턴을 준비하고, AI 활용법까지 익힌다. 그런데 정작 그 AI가 우리가 처음 맡을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첫 경험을 쌓아야 할까.

AI를 잘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말을 부정하지 않는다.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도 없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청년이 사회에 진입할 기회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 청년에게 더 많은 경험과 준비를 요구하기 전에, 그 경험을 시작할 자리가 남아 있는지 물어야 한다. 취업을 위해 AI를 배우는 우리가, 역설적으로 AI 때문에 취업의 첫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사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